국정신문

1996년 1월29일 (월요일)

週刊 / 비매품

國政指標 /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 튼튼한經濟 / 건강한社會 / 통일된祖國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劉世俊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 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391-1027, 395-1031 · FAX 391-1034

金泳三대통령 주재 世推委회의

世界化로 '코리아' 바로세우기

세계화추진 1년을 맞아 이제 세계화는 세계 속에 '코리아 바로세우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화가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지구촌에 '코리아'의 강한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 바로세우기, 곧 나라바로세우기로 정리된 金泳三정부의 후반기 개혁은 세계화를 통한 '코리아 바로세우기'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면모를 일신시킬 것이다. 올해는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의 세계화'가 적극 추진된다. 세계화의 방향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으로 옮아가게 된 것이다.

金泳三대통령은 26일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트며 우리 사회의 세계화 개혁과제를 발굴 제시해온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壽成국무총리 金鎭炫서울시립대총장) 발족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화추진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세계화 성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세계화를 국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金대통령은 세추위 발족 1주년과 관련해서는 "1년전만 해도 세계화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세계화는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세추위 康奉均기획단장(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도 세추위 1년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보고를 통해 "세계화추진 1년 동안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행정, 기업경영, 국민의식과 관행이 모두 일류화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화의 추진방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생활개혁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들어 처음 「지방의 세계화」를 주제로 세추위원 20명과 전국 15개 시·도별 세계화추진민관협의회 위원 1백70명,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金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34년만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면서 "국가차원의 세계화도 지방자치가 잘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지방은 국민 삶의 터전이며 각 지방이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 '세계속의 지방'으로 발전할 때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이러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초작업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역사적 과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란 주제로 발제를 한 서울大 權泰埈교수는 "국경 없는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화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유수기업에 생산입지 제공 △지방산업 구조조정 통한 경쟁력강화 △세계적 기업의 중추기능, 연구개발기능 유인 △지방 고유문화제품·기술의 상품화 등 '지방의 세계화' 전략 유형을 제시했다. 崔箕善 인천시장은 공항, 항만, 텔리포트를 트리포트로 개발, 인천을 세계화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崔珏圭 강원지사도 강원도를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와 잇는 '환동해 권거점지역'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徐光植기자

4·5面 기획특집

世界化추진 종합보고

無限경쟁시대 農政

농어촌 구조개선에 8조6천억원 투입

姜雲太

농림수산부 장관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격동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농업경영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농어촌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의식확산

정부는 그동안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57조원(42조+15조원 농특세)에 달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 재원을 확보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실천하는 한편, 농지·양정·유통·협동조합 등 과감한 제도개혁도 단행하였다. 그 결과 UR협상 타결 당시 우리 농어촌에 퍼져 있던 극도의 불안감과 패배주의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가능성, 그리고 자신감이 열심히 일하는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WTO출범 2년째인 올해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농어촌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선진농어촌 건설과 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금년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총 8조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선진 농림수산업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농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장관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하는 등 농어촌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농어촌지원사업의 선정과 집행에서 농어업인의 참여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둘째, 21세기 일류국가 건설과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벼 식부면적이 줄고 휴경지가 늘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노는 땅을 없애고 최대한 수확해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룬다는 각오로 범국민적 공감아래 쌀의 자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최대한 억제해나가는 한편, 휴경농지의 생산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쌀농사를 지어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확기와 단경기간에 일정수준의 쌀값 차이를 허용하는 등 쌀값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쌀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

「품질인증제도」 운영강화

셋째, 수출농림수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의 시장이 열린 것 못지않게 더 큰 외국의 시장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수산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것이다.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무역진흥기금 97년까지만 조성

통상산업부

1월10일자 서울경제

그동안 準조세형식으로 조성돼온 무역진흥기금의 조성방식이 오는 98년부터 수입업자가 연간 일정액을 무역협회에 자율 납부하는 기부금 형식으로 전환된다.

무역진흥기금은 지난 93년 7월 확정된 '무역진흥특별회계의 개선방안'에 따라 97년말까지 조성키로 하고 그 이후엔 운용수익금만으로 운영키로 했다.

과거 '무역진흥특별회계' 대신 '무역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수입시 내수용 수입물품가액의 일정요율을 부과하던 수입 부담금 징수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즉, 무역협회 회원인 경우에는 수입가액의 1만분의 14(특별회비 포함),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비회원의 경우엔 1만분의 10을 징수,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하되 98년부터는 수입부담금 징수없이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진흥사업을 계속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진흥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98년부터는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진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 만큼 무역업계의 추가부담을 수반하는 조성방식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참고로 95년말 현재 조성된 무역진흥기금은 4백억원(잠정추계)이며 수입부담금 징수제가 폐지되는 97년까지는 약 3천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무역정책과)

不法체류자 자진출석조치가 와전

법 무 부

1월17일자 국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중인 중국 조선족을 검거한 뒤 이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정보원으로 활용, 다른 조선족을 검거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도에서 지적한 해당일자('95.11.14)에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2명을 검거한 바가 없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95년 11월2일 부산시 우2동 소재지에서 조선족 중국인 유구대씨외 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당시 이들이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여권을 갖고 자진출석토록 한 것이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풀어준 것으로 와전된 듯싶다.

또한 보도내용 중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이부춘씨 등은 95년 11월1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에 불법취업자가 있다는 익명의 전화제보를 받고 다음날 검거한 후 퇴거조치('95.11.8)한 자들로 확인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불법체류 중국교포 처리건수는 총 6천1백여건. 이중 김해사무소 처리건수는 1백50여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15일 또는 30일 시한으로 친인척방문 또는 상용목적으로 입국후 불법으로 장기취업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출입국사범과 관련해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수용 처리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가계생활자금저축' 稅率낮춰 분리과세

재정경제원

1월10일자 각지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주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는 금융신상품이 내달부터 판매된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시민들이 소액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저축상품이다. 가계의 소액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적은 이자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개설요건은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 결제가 가능한 계좌이면 되고 불입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그러나 이 저축은 일반저축과 똑같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15%에 비해 5%포인트가 낮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토록 한 것이다.

(중소자금과)

附價稅 신고조사 2~3개월후

국 세 청

1월18일자 연합통신

국세청은 95년도 2기 附價稅 확정신고가 지난 25일 끝남에 따라 2월부터 패밀리레스토랑,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완전 자율신고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세금추징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로 95년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난 것과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한 更正조사는 신고가 끝난 후 바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 않다. 납세자의 신고사항과 지난해 사업실적 및 자체 세원관리팀이 얻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서장이 재량에 의해 개별 신고안내시 정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등 일정기간 자기보완 기회를 준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2~3개월이 걸린다.

(부가세과)

자동변속 차량으로 면허시험 볼 수 없다

경 찰 청

1월15일자 각지

2월부터 일반인도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2종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에 의한 시험응시 계획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내자동차생산업체의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의 생산비율은 현재 40%를 점유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기능시험제도에는 '기어변속구간'을 추가하고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경찰청은 앞으로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이 더욱 늘어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자동차전문학원이 정착된 이후에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교통기획과)

제3회 國務會議메모 〈1월23일〉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 엄단

李壽成 국무총리는 최근 물의를 빚은 일부 자치단체장 총선발언과 관련, 내무부가 자치단체장들에게 4월 총선에서의 공명선거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선거개입과 후보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단호히 다루라고 지시했다.

李총리는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전제, 내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모든 단체장들이 당적에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사무를 공명정대하게 관리 지원토록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식수원개발비 지출

李총리는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과 관련,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해 현재 남부지역 25개 시군의 68만여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고 간이 상수도 의존만도 몇백만 명이며 이들이 모두 우리 형제들이라고 강조, 농촌의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문제가 3년내에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총리는 특히 재경원이 나라살림을 알뜰히 운영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됐으나, 우리가 잘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올려서라도 상수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羅雄培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북 경주시 등 제한급수 실시지역에 대해 긴급 식수원 개발비 93억여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姜雲太 농림수산부장관은 전국적으로 농업용수난이 극심, 저수율이 50%이하인 저수지가 2천5백여개, 30%이하인 저수지가 1천5백개에 달한다고 보고, 시기적으로 저수지 준설이 시급하며 현재 전남북, 경남북도에서 준설을 위한 예산 1천억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라도 지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鄭宗澤 환경부장관도 시기를 놓치면 저수지 준설이 어렵다고 밝히고 농림수산부 자체예산전용 계획을 활용해서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金佑錫 내무부장관은 재해극복을 위해 각도별로 재해대책비 각 10억원 특히 어려운 6개지역별로 3억원 등 5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약관련 발전委 구성 등

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대생 유급위기까지 몰고온 한약분쟁 사태와 관련, 한의약관련 발전협의회를 구성,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한의대생 학교복귀 등 이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일산선 1월30일 개통

李총리는 안전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못받는 점이 있다고 전제, 일산선의 안전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金義在** 서울시 부시장에게 묻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각별히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金 부시장은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에 최대역점을 두고 일일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秋敬錫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앞서 5천6백억원을 투입, 5년1개월만에 완공된 지축~대화간 일산선이 1월30일 개통, 12분 간격으로 하루 1백82회 왕복 운행된다고 보고했다.

金長淑 정무2장관은 최초 여성 대사인 李仁浩 전 서울대교수의 핀랜드대사 임명 의결과 관련, 여성계를 대표해서 특별히 감사한다고 밝히고 정부에서 능력있고 자질있는 여성을 많이 발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리 : 李文祚 공보처 종합홍보실 제1기획관

'96 감사원 監査운영 방향

民生분야 非理 감사 강화

감 사 원

국가 최고司正기관인 감사원이 '안정속의 개혁'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아래 96년 감사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李時潤 감사원장 주재로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주요공적단체 등 1백2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96년 감사관계관회의'를 열어 96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과 자체감사 운영방향, 95년 감사실적평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에 기여

이번 회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져나올 각종 부정부패와 무질서 등 민생불안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사정 준비, 감사기능 강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했다.

감사원은 96년 감사운영 기본방향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민생분야 감사확대 ▲부실공사 추방 등 안전문화 정착 유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사정 전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 ▲성장 장애요인 제거·국가경쟁력 강화▲감사를 통한 적극적·창의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집약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 만들기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생분야 감사는 환경·수질·교통서비스 개선실태 점검과 노인·장애자·저소득자 등 그늘진 계층의 복지향상 지원에, 안전문화 정착 유도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실태 점검과 다중 이용시설물, 노후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고질적인 부조리행위와 선거기를 틈탄 무질서·비리 척결을 위해 지역 감찰반을 연중 가동하여 명절 등 취약시기에 취약기관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운영방법은▲감사일정을 미리 알려 국민의 감사요망사항 적극 반영(공개감사제) ▲기관별 연중감사일수를 1백일 이내로 통제 등으로 구체화됐다.

2백56개 취약업무 중점 감사

감사원은 또 2백56개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중점, 표본추출 및 감사방법 등 '자체감사 세부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감사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96년 자체감사는 감사기관간 합동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원과 중앙부처 및 15개 시·도의 감사계획을 3월부터 전산화(ON LINE)해 감사계획을 통제·조정하여 중복감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관용 조치하고 감사교육원에서 자체감사요원의 교육을 확대하여 96년에는 1천6백8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95년 자체감사 실적평가에서는 1백20개 평가대상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통상산업부,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기관(14.2%)만이 상위 평가를 받아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가 요망됐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부진사유를 규명, 감사책임자의 직무태만이 인정되면 교체권고 또는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1백61개 기관, 87개 사항을 감사해 총 1천4백69명을 징계·문책하고 51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또 추징·회수 1천5백94억원, 수입증대 8백75억원, 국민부담 경감 1백23억원, 예산절감 27억원, 환급11억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감사관계관회의에서 **李時潤** 감사원장은 "총선을 전후한 불법·무질서 행위와 취약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추방하고 민생관련분야와 안전문화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감사활동으로 개혁의 선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기관별 자체감사에선 6천6백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7백65억원을 추징·회수하고 3백13명을 문책한 것으로 집계됐다. **宣慶喆기자**

地自體 경영현장 ② 인천市

'廢水川'이용 京仁 최대 휴식처 만든다

인천시내 11개 자치구가 지난해 34개의 크고 작은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 재원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중 인구 39만명에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신개발지역 남동구는 새로운 재원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남동공단 2단지내 침수방지 등 홍수조절용으로 조성된 남동공단 遊水池(장수천) 22만6천평을 대규모 위락·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장수천은 그간 각종 생활하수 및 공장·축산폐수가 유입되어 심한 악취는 물론 전염병 발생의 근원지가 되는 등 수질오염의 극치를 이뤄 고질적인 주민 민원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이를 97년까지는 각종 고기들이 뛰어노는 맑은 물로 정화시켜 여름에는 보트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 경인지역 최대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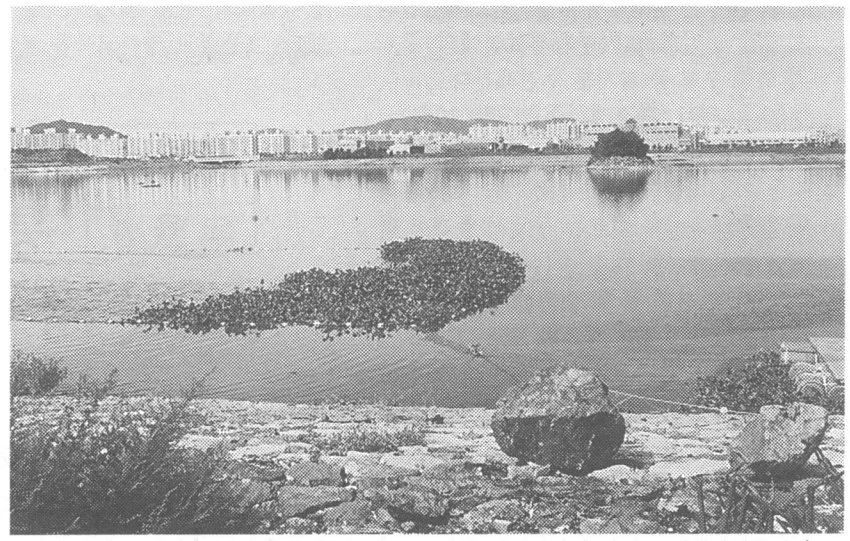
98년 이후 연간 순수익 약5억원

이를 위해 먼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공단유수지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수생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을 식재했으며 오수관도 설치했다. 또한 장수천에 맑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일정수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인천대 공원에 개발수심 2m, 저수량 7만2천톤 규모의 인공호수를 지난해 말 완공한 상태이다. 그 결과 현재 유수지 물이 한결 깨끗해져 붕어·미꾸라지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는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는 한편 유지용수 확보 등에도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金容模 남동구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지에 5백척의 보트를 띄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 이용객들로부터 매년 약 11억원의 수입을 올려 연간 순수익 5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이곳에서 확보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남동구는 지자체 출범 이후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구청 자체 주유소 운영' '만수6동 일대의 개천 복개를 통한 롤러스케이트장 개장' 등 다양한 묘안이 제기돼 이것들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중서부 해안에 위치한 전원 농촌지역 강화군은 재정자립도가 약 20%로 미약해 이곳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원확충에 분주하다. 화도면 상방리 및 사기리 일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개발하는 '마니산 국민관광지화' 사업이 그것이다. 관광지 조성면적을 추가로 확장하여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등과 이벤트사업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용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다.



심한 악취로 민원을 야기해온 남동공단 유수지를 정화시키기 위해 수생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을 심어, 부영양화 방지 등 깨끗한 물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니산 국민광관지화 통한 세수 증대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6억원을 투자, 관리사무소·화장실·주차장·야영장·광장 등 공공시설을 확충했으며 오락시설로는 민속놀이장·어린이놀이장·피크닉장 등을 설치했는데 우선 95년 11월 현재 입장료·주차료·매점임대료 등에서만 1억원의 수입이 발생돼 앞으로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내리와 외포지구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위락 및 숙박시설로 분양하는데 이렇게 되면 99년까지 2백29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옹진군은 유인도 26개와 무인도 74개 등 1백개의 섬으로 형성된 지역여건을 감안,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있다. 관내에서 일정수준의 자본과 시설·인력을 갖춘 민간업자에게 바닷모래 점용료 및 채취료를 징수하게 하는 방식인데 지난해만도 여기에서 약 58억원의 엄청난 순수익을 올려 군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밖에도 중구의 경우 성인병과 퇴행성 노인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치료기능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의료비부담도 경감해주고 또 지방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되고자 보건소내에 전문적인 종합물리치료실을 운영, 작년 하반기 동안만 5백만원을 벌었다.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1천4백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중구는 영종도 국제신공항 건설과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관광農園을 개발한다. 영종도 일대 6천여평에 38억원을 사업비로 투자, 주말농장·사슴사육장·흑염소방목장 등은 구청 직영으로, 특산물판매장·숙박시설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수익액을 매년 약 2억2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全宣珠기자**

世界化 추진 1년 – 10개 主題 29개 課題

'삶의 質' 관련 정

'세계화 元年'으로 기록될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지난 1년은 '변화와 개혁'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육·문화·환경·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법조개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굵직한 과제에서부터 민생과 직결된 복지증진대책에 이르기까지 한해동안 모두 29개 세계화과제의 선정,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변화와 개혁으로의 세계화', 그 기관차의 소임을 다해온 것이다.

이즈음 시대적 소명으로 떠오른 역사바로세우기와 나라바로세우기의 바탕에도 이들 낱낱의 세계화추진과제의 정신과 방향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 발족 2년째를 맞아 세추위는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우리나라가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 노사관계정립 등 국정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개혁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정보화 개혁과 물적 '인프라' 구축 △치안서비스, 민원행정, 복지·환경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개혁 △통일과 대외전략과제 등 안정속에서의 끊임없는 개혁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세추위 발족 1주년을 맞아 '세계화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명시된 10개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펼쳐진 구체적 과제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1 환경모범국가의 건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국가를 만든다.

◇ 환경비전 21(6월)=경제성장의 모범국가에서 환경보전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 △청정한 공기확보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순환형 사회구조 형성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공동체 조성 △환경관리체제의 선진화 △지구환경보전에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 과제를 추진해간다.

◇ 21세기 환경개선종합대책(12월)=환경비전 21의 세부실천계획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환경기술의 진흥과 환경산업 육성에 이르는 구체적 플랜이 담겨있다.

먼저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2001년까지 8개의 다목적 댐을 개발하고 광역상수도 확대, 현재 33%대에 머물고 있는 급수율이 49%까지 높아진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돼 현행 45개에 불과한 기준 항목수가 98년에는 85개, 2005년에는 1백20개로 늘어난다. 하수처리율도 2001년 65%, 2005년에는 80%로 개선된다.

상쾌한 공기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의 확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에 한정돼 공급되고 있는 LNG는 2001년 광역시, 2005년에는 전국 중소도시까지로 확대 공급된다. 폐기물의 최소 배출과 자원화도 적극 유도된다.

이를 위해 현재 처리비용의 30~40%인 쓰레기 수수료 요율이 2001년까지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95년 현재 7곳에 불과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2005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토양, 지하, 연안역의 환경보전대책을 펼쳐가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2 신교육체제의 구축

세계화시대에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사회 개인의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체제를 갖추고 국제적 감각과 민족의식이 균형을 이룬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자치제의 활성화를 이뤄간다.

◇ 세계화추진을 위한 외국어교육강화방안(3월)=전세계 컴퓨터정보의 80%, 라디오 방송의 60%, 전화통화의 65%가 영어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영어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정규교과화한다.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가능한 한 전담교사로 한다.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해외집중연수를 확대한다. 효율적 교육을 위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CD-ROM 타이틀 등)의 개발등 교육방법, 교재의 개발을 서두르고 시설도 늘려간다.

3 지식정보 일류국가 건설

'정보화에 의한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인 운용체계로 서로 연계하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

◇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방안(3월)=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완전경쟁환경을 조성해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극대화한다.

◇ 공공부문 정보화추진계획(8월)=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바탕위에 2010년까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 공공부문 정보화가 촉진됨으로써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종합환경정보시스템 △교육정보화사업 △보건의료정보망 △종합물류정보망 △산업정보전산망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행정종합정보망 △전자주민등록카드 개발 등도 추진된다.

◇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추진방향(12월)=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초고속국가통신기반의 구축 등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이 본격화된다.

◇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12월)=先국내경쟁 後국제경쟁의 원칙아래 대외시장개방에 앞서 국내통신사업자간 경쟁체제를 갖춘다. 한국통신,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간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해나간다.

◇ 서울의 동북아지역 정보와 연구중심지화 방안(2월)=기존 연구기관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의 입체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한 동북아 지역 정보 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 이 연구기관을 미국의 옌칭도서관 수준의 정보자료센터로 만들어간다. 지역연구를 위한 연구기금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지역연구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4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지구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일류수준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한다.

◇ 21세기를 대비한 신해양정책방향(3월)=신해양질서에의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95년 10월 UN해양법협약비준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어간다. 연안역종합관리체제를 갖춘다. 전국 63개의 연안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양오염실태를 분석, 해역별 특성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다. 해양오염의 80%를 차지하는 육상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 배후지역에 대한 '폐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반시설을 늘린다. 해양경제활동영역을 개척하고 경쟁력 갖춘 해양산업을 육성한다. 유전공학·반도체·신소재기술 등과 연계된 첨단 해양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 해양개발능력을 극대화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해안 어장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97년까지 각도에 1곳씩 수산종묘배양장을 설치한다. 90년대초 7%에 불과한 해양산업의 GNP 점유비율을 2004년까지 12%로 높인다.

환 경 깨끗한 물과 공기로 '건강공동체' 조성

교 육 '통일된 세계중심國家' 향한 人材 양성

경 제 풍요·성숙·안정으로 '삶의 質' 향상 기여

5 경제의 세계화

풍요롭고 성숙하며 안정된 선진경제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자율과 경쟁, 개방을 통해 경제효율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한반도의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화 전략(4월)=통일후의 여건을 감안, 동북아 국제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 항만을 적기에 개발토록 한다. 부산 신항과 광양항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한다. 선진해운국가 수준의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한다.

◇ WTO체제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방안(7월)=보조금제도를 WTO 협정에 맞도록 고쳤다. 운용방식도 정책금융에서 재정지원 위주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다. 해외투자 제한업종을 14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외국인투

부정책 우선순위 높였다

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대상범위를 넓히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세계촌 추진계획(11월)=우리 고품질 농산품, 전통고유상품에 농촌지역에 내재한 문화적 가치를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전국에서 2~3개 시범지역을 선정, 모델사업으로 시작하고 그 성공여부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6 삶의 질의 세계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풍요로우며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상호 상승적,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비전을 펼쳐간다.

◇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6월)=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천55억원을 확보했다. 노인·장애인·불우아동 등의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 수준으로 올린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대책도 마련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대책을 세우고 재가복지서비스체계도 갖춰나간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반도 닦아나간다.

◇ 여성역할과 지위의 세계화 추진방향(6월)=여성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생애주기(life cycle)에 맞추어 사회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10월)=여성의 육아 등 가사활동 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여성이 능력과 개성에 따라 사회활동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여성의 공직참여비율제고 목표설정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성차별의식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7 문화대국 건설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다원주의적 개방적 가치관의 함양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남의 문화에는 존경심을 갖는 한편 문화예술을 삶의 일부로 향유하는 성숙한 문화대국을 가꿔간다.

◇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방안(4월)=한국적인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주요 도시의 시내관광 운영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내 관광코스를 개발해나간다. 세계수준의 국제회의와 국제기구 유치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개선한다.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광안내체계를 갖춘다.

◇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방안(6월)=외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과정을 보완한다. 자매결연 등을 통해 학생교류를 활성화한다. 지역연구소를 육성 지원한다. 지역연구를 위한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국제관계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 문화산업의 발전방안(8월)=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완비하고 규제는 완화해나간다.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한다. 금융 세제상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 만화산업의 발전기반을 닦아나간다.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개발한다.

◇ 국민문화예술의 생활화방안(10월)=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키워간다. 고객중심의 문화예술 전달체계를 갖춰간다.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를 촉진한다. 지방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간다.

8 지구정치시대의 국가운영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민족공동체 구현,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와 사회통합,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정치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간다.

◇ 국가이미지 개선방안(8월)=국가이미지의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한다. 대외홍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가이미지 개선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대외홍보용 국제위성방송체제를 갖춘다. 코리아윈도우(Korea Window)를 설치 운영한다. 문화홍보를 강화한다. 국민의식의 일류화운동을 전개한다.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전략(10월)=지방재정의 확충에 힘쓴다. 지방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지방의 산업입지여건을 개선한다.

◇ 아시아·태평양시대 주역으로서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11월)=경제 측면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APEC을 주축으로 동아시아와 북미 경제권의 연계 강화에 주력한다. 안보면에서는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자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UN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힘입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외교전략을 개발한다.

◇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12월)=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지원 강화로 거주국 주류사회내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국제법과 거주국의 법,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현지주민과의 화합과 모국과의 교류행사를 지원한다.

9 법질서의 선진화

법률영역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되고 국민의 사법이용과 접근이 쉬워지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받는 등 21세기 새로운 법질서를 갖춰간다.

◇ 법률서비스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세계화(4월)=법조인 수를 늘린다. 현재 1천4백24명인 판사 정원을 2000년 1천7백24명으로 증원한다. 검사도 9백87명에서 1천2백87명으로 늘린다. 법조제도와 관행도 개선한다. '법관윤리강령' 제정 등 부정적 관행을 떨쳐간다. 변호사의 보수도 적정화한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편한다.

◇ 법률서비스와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12월)=법학교육제도를 개편한다. 사법연수제도는 종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학원식으로 운영한다. 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다변화한다.

사법시험제도도 개편된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 97년부터 시행한다.

10 세계화시대의 행정개혁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두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 국민에 대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깨끗하고 능률적인 정부,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형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만들어간다.

◇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7월)=과학적인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개인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한다. 교육출장제를 활성화한다. 임용전 교육을 강화하고 직급별 기본교육을 개선한다.

◇ 고급공무원 임용과 육성의 세계화방안(8월)=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개방형 임용방식을 넓히고 국제분야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확충에도 힘쓴다. 고시제도도 개편한다.

◇ 조세행정 개선방안(11월)=관 주도적 세정에서 탈피, 업무체계를 과감히 선진화한다. 세정의 객관, 과학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적관리 등 주요 업무를 전산화한다. 계층간 업종간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간다.

◇ 자동차 민원행정의 세계화방안(12월)=고객 중심의 자동차 운전면허 민원행정체계를 갖춘다.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한다.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한편 발족 초기 세추위가 선정한 세계화과제는 모두 47개 과제로 이 가운데 29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부터 추진하게 될 과제는 △공직사회의 선진화와 부정방지 △우리국민의 국제기구진출 확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기초과학 연구능력 강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치안서비스 개선 △실무공무원 임용과 육성의 세계화방안 △세계화추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혁방안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행정체제 개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기구 설치방안 △사회복지증진 중장기 계획수립△세계화와 성숙한 시민의식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방안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각종 단체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 △세계화를 위한 노사제도와 관행의 합리화방안 △기업경영체제의 세계화 △세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정치의 세계화방안 등이다.

정리=徐光植기자

正體性·가치관 심어 文化자긍심 확립 — 문화
질좋은 서비스로 기업형 政府 만든다 — 행정
一流수준 기술확보 세계화 실현 앞장 — 과학

공보처 '역사 바로세우기' 집단토론

장관-직원 '쌍방향' 대화

朴 秀 榮 정부간행물제작소 편집제작과.

행정부처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공보처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집단토론(Brain storming)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오후 3시반부터 吳隣煥장관을 비롯한 각 직급별 직원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공보처의 역할' 찾기에 들어갔다.

공보처가 이같은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15일자 국정신문에 정부대변인이기도 한 吳장관이 '역사 바로세우기는 나라 바로세우기'라는 주제의 글을 실은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 기고문은 金泳三정부의 개혁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것.

吳隣煥장관을 비롯한 90여명의 각 직급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벌인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공보처의 역할' 찾기 집단토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나라 바로세우기를 하는데 있어서 공보처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1인당 제한시간 3분. 발제를 겸한 吳장관의 개혁의 이론적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곧이어 토론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吳장관이 직접 지명해서 토론자를 선정했으나, 곧 발언신청이 쇄도(?)하기 시작, 토론장은 열기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각종 회의나 토론에 이골이 난 노련한 국·과장들조차 새로운 아이디어 짜내기에 고심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장은 젊은 사무관들의 무대였다. 평소 직속상관 눈치 보느라 자기 주장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무관들은 기존 홍보논리의 구태의연함을 꼬집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정홍보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정부 광고의 비효율성, 비대한 기획기능, 일방통행식 국민홍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개혁의 정치적 이용, 일관성을 잃은 정부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내렸다.

장장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가정·직장·사회에서 먼저 나를 바로세우는 것이 곧 역사와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임을 공감했다.

역사 바로세우기나 나라 바로세우기의 주체가 정부나 특정집단이 아니라 결국 국민 각자 즉 '나'라는 개인이며 내가 변화할 때만이 개혁이 가능하다는 '자각의 시간'이었던 셈이다.

吳장관은 총평을 통해 "토론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일체가 되는 홍보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보처는 이날 토론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계속 마련키로 했다. ■

선거법 해설 ③

①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및 통·반·이장의 선거운동 제한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上〉
③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下〉
④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내용
⑤ 당원단합대회·교육 등 금지내용
⑥ 의정활동보고 대상에 관한 질의
⑦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⑧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⑨ 후보자등록 신청 및 서류
⑩ 후보자등록 무효사유
⑪후보자등록상황 및 부재자 투표절차
⑫ 당선무효사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95.12.30) 〈下〉

선거비용의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선전벽보·공보,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는 비용은 물론 선거사무소·정당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시켰다. (법률 제120조)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아니면 소속직원에게나 선거구민을 통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한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소속정당의 정강이나 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도 금한다. 다만 그해 자치단체장이 선거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당해 지자체장이 입후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정당에서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단, 중앙당 단위의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때는 참석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그해 지자체장이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행사·경로행사·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행위와 아울러 통·이장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출구조사가 허용됐다. 선거날에 TV·라디오 또는 일간신문사는 선거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투표마감시간 직후에 공표하도록 정했다.(법률 제167조 제2항)

자료제공:중앙선관위

투표비밀 침해 않는 범위서 출구조사 허용

한평생

故 김남주詩人이 회고한

'인간적' 對共 수사관

鄭 仲 模
前 은평경찰서 보안과장

95년 6월 명예퇴직을 하던 날 후배들의 배웅을 받고 있는 모습.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별빛 같은 일꾼들이 적지 않다.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지위나 화려함이 없는 곳에서의 일이기에 더욱 그 빛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 아닐까?

구랍 28일 고향에 있는 후배를 돕고 상경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중모 총경도 음지를 밝혀주는 별 같은 삶의 궤적을 그려온 평생이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61년 경찰에 투신해 대공업무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 35여년을 일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자신을 숨겨야 했던 익명의 세월이었다. 그래서 76년 청룡봉사상 忠부문 수상자 명단에도 본명을 숨겨야 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근무할 당시(79년) 南民戰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만으로도 수사책임자였던 鄭총경의 성품과 업적이 잘 드러났다.

사건의 연루자였던 故김남주詩人은 그 당시 수사하는 동안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생전에 회고한 바 있으며, 자신의 약혼자가 면회왔을 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직접 나서서 도와줬다며 "시골 교장선생님을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 포근하고 다정했던 분"으로 기억했다고 한다.

또 鄭총경은 자신의 손을 거쳐간 시국사범들을 끝까지 돌봐주기로도 유명했다. 현재 국내 굴지의 정밀화학을 운영하는 林모씨는 80년대 초 불법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鄭총경에 의해 검거됐다. 林씨는 전과 때문에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곤욕을 치렀고, 그 이후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공장 인허가 문제라든가 사업상 외국에 나갈 경우 여권 발급 때도 애로가 많았다. 이때마다 鄭총경이 힘이 돼 주었던 것.

대공업무에 종사하다보니 주로 간첩들과의 교분이 두터웠다. 사형선고를 받은 女간첩에게 집에서 만든 반찬을 덜어다 주는 등 간첩과 수사관이라는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는 성품이었다. 女간첩은 자신에 대한 따뜻함에 보답이라도 하듯 사형집행 전날 4남매와 부부의 털양말을 손수 떠서 鄭총경에게 건네준 일화가 동료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회자된다.

퇴임을 눈앞에 두고 鄭총경은 자신의 경찰초년병 시절을 회상하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사정이 딱한 청년을 너무 융통성 없이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며 자신의 고뇌와 갈등을 후배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평생을 두고 딱한 사람 도와주기를 좋아해 주위에서 잇속 못챙기는 양반이란 소리를 숱하게 들었던 鄭총경.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달려온 후배와 동료들은 "평생을 국가안보만을 생각하다 가셨다"며 애통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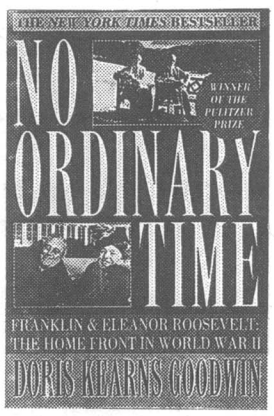
李順姬기자

내가읽은책

루스벨트 대통령부부와 제2차 세계대전

"국가가 어려울 때는 그 어느가치도 국가전체를 위한 일에 우선할 수 없다"

金 明 植 총무처 고시2과장



인류역사를 거쳐간 수많은 위인들에 관한 기록들은 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지침이 되므로 즐겨 읽혀지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의 위인-우리들에게는 1930년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부부의 전기와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격동의 역사기록도 이러한 면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

루스벨트는 신체장애라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1928년에 뉴욕주지사, 1933년에 대통령에 각각 당선되었고 신체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풍부한 지성과 감성의 계발에 힘썼다. 특히 어릴 때 그의 고모가 화재로 사망한 뒤부터 불에 대한 공포심으로 잠을 잘 때도 문을 잠그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인이 된 후에는 이를 극복하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집중력과 신념까지 갖게 되었다.

한 언론인이 표현한 대로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매사에 자신이 넘쳐 흘렀지만, 휠체어에 앉고 나서부터는 항상 편안한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띠며 겸손하게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TV의 공익광고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모델로 등장시키면서 '누가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을 시청자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바로 신체적인 약점을 딛고 성숙한 인격과 의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네번씩이나 대통령직을 역임하기까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인간승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룬 정치지도자

이 『비상시국(No Ordinary Time)』은 1940년 5월9일 저녁, 잠자리에 들려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주벨기에 대사가 히틀러의 서유럽 침공소식을 다급하게 전화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유럽전선과 지정학적 이유로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의 위치에서 한걸음 비켜나 있던 평시상태의 미국. 그러나 미국도 계속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1차대전이후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재무장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기습침략함으로써 인근 유럽국가를 함락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1930년대의 심각한 경제공황상태와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단행된 무기금수조치를 위한 일련의 中立國法(Neutrality Acts)이 의회에서 통과된 상태로서 參戰論보다는 中立論이 우세했지만 결국 독일의 진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민은 전쟁개입론자와 방관론자간의 논쟁끝에, 마침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해양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獨立論은 수그러들고 제2차대전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 고도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무궁무진한 자원을 바탕으로 미국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것은 국내에서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주었다. 4년간의 전쟁기간 국내에서는 파업과 암시장의 성행, 인종폭동 등 어려운 시련도 있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최전선과 후방, 군인과 공장, 국민사기와 대중연설, 국민과 정부, 다가올 평화와 전쟁목표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한 탁월한 지도자였다.

한편 전쟁초기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자 미국국민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3차 연임문제를 자연스레 거론하게 된다. 일부 반대여론도 없지 않았으나 1940년은 국가의 비상시기이므로 당시로서는 루스벨트만큼 세계문제를 다룰 높은 식견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별 문제없이 당선되어 1941년에 세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고, 전쟁이 끝나던 해에는 제2차대전의 승리를 발판으로 1945년 1월 네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얄타회담 그리고 우리는 …

네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틀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흑해연안의 얄타에서 처칠, 스탈린과 비밀리에 만나 전후 세계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회담에 임하는 세 사람의 속셈은 사뭇 달랐다. 루스벨트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구성하여 러시아를 가급적 일본과의 극동아시아 전쟁에 개입시키는 데 있었고, 처칠은 영연방을 존속시켜 유럽이 한나라의 독점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스탈린은 폴란드를 독일에서 분리하여 귀속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참전이 절실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쿠릴열도, 사할린, 만주 등에서의 러시아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협상을 타결하고 만다.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전쟁에서의 총칼 대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으로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밖으로는 자국을 위한 적극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한 정치인 루스벨트 대통령의 역정과 함께, 비록 한때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어나간 그의 인간적인 면과, 일체의 화려한 수식어 대신 단지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만을 묘비에 기록하기를 바랐던 소박하고 겸허했던 한 인간의 특이한 삶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그 어느 가치도 국가전체를 위한 일에 우선할 수 없다는 엘리나 루스벨트 女史의 말처럼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 알았던 미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큰 신뢰와 사랑을 전폭적으로 보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굿윈(Doris Kearns Goodwin)여사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저술, 퓰리처상까지 받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루스벨트일가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과의 대화와 일기, 편지, 비망록 등을 모아서 이루어졌다. 이 책을 다 읽고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였지만 승리로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 조정력, 리더십과 통찰력을 살펴볼 수가 있다. ■

『NO ORDINARY TIME』
Doris Kearns Goodwin編
Simon & Schuster刊 · 1995년版

영어한마디 ⑲

자동차 바퀴의 바람이 빠지면 주유소나 수리소에 들러 채운다. 요즘은 타이어 압력을 재는 휴대용 측정기가 있으므로 지니고 다니면 편리하다.

A : What can I do for you?
B : Fill'er up and check the tires, please.
I think they're ***low on air.***
A : Certainly.

Tires are low on air.
(바람이 빠졌어)

직원 : 무엇을 봐 드릴까요?
손님 : 기름 넣고 타이어 좀 봐 주세요.
바람이 빠진 것 같아요.
직원 : 알겠습니다.

"바람이 빠지다"는 영어로 ***low on air*** 라고 한다. "차에 기름을 채우다"는 fill her up, "펑크났다"는 I've got a flat tire인 것도 알아두자.

스티븐 강 홍익大 강사

행정전산망용 PC규격 다양화

공무원 2인당 1대씩 보급한다

총 무 처

올해부터 정부기관에서도 성능 높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총무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전산망용 PC표준 규격 다양화'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 기종과 용량 등을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택,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PC규격은 486이나 펜티엄 등 기종별로 한가지로 국한됐기 때문에 다양한 구매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PC제품의 선택범위를 넓혀 CD-ROM이나 모뎀 등을 장착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휴대하기 간편한 노트북 PC 등도 공무원에게 보급, 출장을 가서나 자택에서도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급하는 PC의 기존 규격을 486DX나 펜티엄급으로 하되 중앙처리장치(CPU), 모니터, 메모리, CD-ROM, 모뎀 등 주요 부품을 수요기관이 업무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용량을 갖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또한 현재 민간에 확산되고 있는 노트북PC, 잉크젯 프린터에 대해서도 호환성 등을 감안하여 표준규격을 정해 각 기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해온 표준규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Q표시 허가시험과 병행해 실시토록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아울러 총무처는 행정전산망용 PC 보급을 95년말 현재기준 공무원 2.5인당 1대꼴에서 올해는 2인당 1대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全宣珠기자**

PC주요부품의 규격 다양화

구 분	필수규격	선택규격
중앙처리장치	486DX(100㎒) 펜티엄(100㎒)	펜티엄(120, 133㎒ 이상)
주기억장치	8MB	16, 32, 64, 128MB 이상
모뎀	없음	14,400 또는 28,800bps 이상
HDD	540MB(486DX)	1GB 또는 1.2GB 이상
CD-ROM 드라이브	없음	CD-ROM 드라이브 (4배속 또는 6배속 이상)1개
모니터	14인치 컬러	15, 17, 20인치 컬러

종합청사게시판

96년도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총 무 처

금년도 명예퇴직 예정인원은 1천7백명으로 매 분기별로 나누어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는 2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2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까지는 잔여기간중 5년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50%, 5년이상 10년이내는 25%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도 예정인원은 1천8백명이었으나 94년 12·3 정부조직개편, 95년 6·27지방선거, 철도청 인력감축 운용방침 등으로 실제로는 2천41명이 명예퇴직했다.

총무처는 이 제도의 시행이 승진적체 현상을 상당폭 완화하는 등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수시로 결정하는 등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민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시행. 농어민들의 처지에서는 공단에서 상환받고 있는 최소한의 소송비용상환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농어민에 대해서는 이 비용까지도 상환을 면제시켜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농어민들은 법률구조신청시 농지증명이나 조합원 명의 등에 의해 자신이 농어민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소송비용상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올해 증원배치될 38명의 공익법무관만이 아니라 공단 직원도 1백명 추가 증원해 농촌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배치 못하던 원주·강경·해남 등 13개 출장소에까지 공익법무관과 공단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공채널 K-TV(14)

□ **특집 '96 나라살림' (29~2월3일, 오후2시)**

▲전국 각 부처의 96 주요업무계획

29일 법무부, 30일 농림수산부, 31일 통상산업부, 2월1일 과학기술처, 2월2일 총무처·공보처, 2월3일 통일원

安又萬 법무부장관이 올해의 중점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오늘의 국정(29일, 오후4시10분)**

▲96 감사운영 방안

국가 감사역량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96년도 감사원 감사지침 중점 취재 구성

□ **정보 파노라마(30일, 오후4시50분)**

▲정보초점:지방세 비리 척결 자율평가제 실시

▲파노라마 현장:한국여성개발원

▲법과 생활:해양오염방지법

▲생활백과:담배 이렇게 끊으세요

□ **K-TV광장(2월3일, 오후9시20분)**

▲북한정세와 한반도의 안보

은인영 국제문제연구소장 진행으로 최근 식량부족과 체제 불안 등 위기에 처한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분석, 우리의 안보전략과 대비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 **세미나중계실(29일, 오후2시40분)**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교육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최, 12월13일 중앙교육원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던 세미나를 보도한다. 김준오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원의 기조강연과 3개의 주제발표 토론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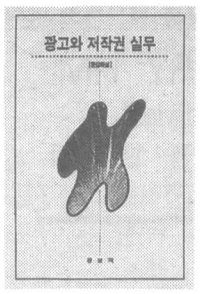
□ **영상 어제와 오늘(2월2일, 오후8시50분)**

▲종묘제례:종묘 세계유산등록 기념 우리문화 우수성 조명

정부간행물

가상분쟁 질문에 문답식 해설

『광고와 저작권 실무』



최근 국내외에서 광고와 관련한 저작권·초상권 등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동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광고산업이 해외진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싣고 있다. 본서는 광고물의 저작권성 여부, 타인의 저작물 이용 등 광고와 저작권에 관한 기초지식, 광고업계가 경험한 분쟁사항이나 궁금하게 생각한 문제 및 분쟁예상 가상질문(79개문항)을 문답식 해설로 구성했다.

〈**공보처刊**·신국판·245쪽·비매품·문의 720-1456,7〉

1백21話로 엮은 근대역사서

『알기쉬운 독립운동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박성수 교수의 집필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전후해서 8·15광복까지의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사를 1백21話로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서술했다. 관련사진을 함께 실어 이해도를 높였다. 모두 9장으로 구성돼 1장에는 일제침략의 서곡, 2·3·4장은 우리민족의 저항, 5장은 합방 이후 암흑기와 민족의 수난, 6장은 3·1운동과 민족의 각성, 7장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8장은 일제의 발악과 민족 최후의 결전, 9장은 8·15광복과 그 교훈을 싣고 있다.

〈**국가보훈처刊**·신국판·384쪽·비매품·문의 780-9808〉

지역별 추진사업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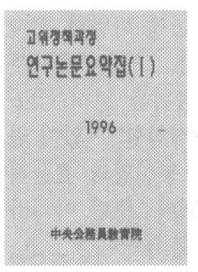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거리』

각 시·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현황 및 사례 등을 엮은 책.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 거리사업의 지침서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취지·조성방법·방향 등 계획과 실제를 제시. 문화의 거리 사업을 입안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부刊**·국배판·208쪽·문의 720-3816〉

실무관련 논문 10편

『고위정책과정 연구논문요약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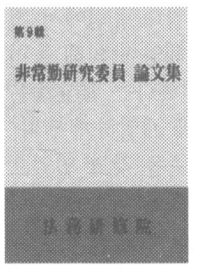


93년부터 실시한 정부 국장급 공무원의 '고위정책과정' 수료생(1~3기, 113명) 연구논문을 요약, 일반행정·외교안보 등 10개 대주제로 분류·편집했다. 이 논문들은 공직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고급공무원들이 그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로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刊**·크라운판·274쪽·문의 500-8526~7〉

남북교류 관련 등 3편 실려

『非常勤硏究委員 論文集』



기업인들의 남북 왕래 및 경제교류의 증대시 발생할 제반 법률적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토록 제시한 '남북경협 생활화에 따른 제반 법적 보안 조치', 노동분야에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상 분쟁사항인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그리고 최근 증대하고 있는 약물관련 범죄자의 처우관련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마약사범 수용자의 효율적인 처우대책' 등 연구 논문 3편을 수록했다.

〈**법무연수원刊**·국판·207쪽·문의 0331)281-3140·비매품〉

취업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여성잠재인력 고용확대와 평등제고 방안』

우리나라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변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6개 공단지역(구로, 남동, 반월, 구미, 청주, 하남)의 여성취업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선 여성노동의 총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6개 공단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단지역 여성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실태조사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고용촉진과 평등제고라는 두 목표를 일관성있게 추구할 수 있는 여성정책방향을 논하고 정책대안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과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정무장관(제2)실刊**·크라운판·146쪽·문의 720-2262·비매품〉

누구나 알아야 할 세무매뉴얼

『세무편람』

국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질과 업무능률향상을 기하고 알찬 납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신규 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과 분야별 업무처리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한글맞춤법표기, 공문서 작성, 고지서 송달, 소송 수행, 금융조사 요령, 컴퓨터 사용방법 ▲업무분야별 처리요령 및 처리절차와 세법요약 ▲업무참고자료 등 전분야에 걸쳐 실무위주로 집약된 내용을 싣고 있다.

세법과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각 분야별로 앞부분에 계산구조 및 업무흐름도를 넣었으며 96세법 개정안과 금융종합과세 내용을 반영했다.

〈**중부지방국세청刊**·신국판·557쪽·문의 224-9562·비매품〉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서울(02) 교보문고 3973-628, 종로서적 732-2331, 대한통계협회 725-4344, 한국경제서적센터 737-7498, 을지서적 757-8991,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 734-6818, 태평서적 777-7551, 도서출판 진한도서 319-3535, 동화서적 555-7312, 서울문고 553-3038, 매거진월드 785-6136, 한국통계서적센터 712-9301, 세종서적 776-4001, 한국잡지종합전시관 735-9464, 꿈나무 812-0348, 조우회 정부간행물판매센터 536-6377 / **부산**(051) 영광도서 816-9500, 부산도서 517-1011, 문창서적 241-2411 / **대구**(053) 학원서림 425-0050 / **인천**(032) 대한서림 762-7337, 시민서림 864-5577, 부평문고 529-0077, 한겨레문고 515-2600 / **광주**(062) 일신문고 228-2727 / **대전**(042) 경제자료안내실 580-4414, 대흥문고 254-7007, 문경서적 253-8131, 대전서적 253-5019 / **경기** 경제자료안내실 (02)502-2312 교학사 (0331)255-5706, 동아서적 (0331)255-6436, 경기서적 (0331)255-7500 경인문고 (032)654-1677, 희문서적 (0344)966-1102, 원당서점 (0344)966-4545 / **강원** 교학사 (0361)54-4133, 투비서점 (0371)43-0345, 강릉서점 (0391)648-3178 / **충북** 청주서점 (0431)221-5724, 문학사 (0441)847-2819 / **충남** 양지문고 (0417)556-6001, 문광사 (0416)55-2605, 종로서적 (0452)935-1313 / **전북** 홍지서림 (0652)88-5311, 대한서림 (0653)52-7700, 원서점 (0653)54-2785, 동지사서점 (0653)855-2717, 중앙서점 (0681)535-2784, 진서점 (0671)625-4988, 동화서점 (0673)42-5149 / **전남** 한림서림 (0631)44-5703, 일광서점 (0661)52-4414 / **경북** 학원사(0562)47-3585, 학원서점(0546)456-6222, 스쿨서점 (0571)57-9110 / **경남** 학문당 (0551)46-2925, 학원사 (0551)46-4510, 고려서적 (0591)42-4601, 진주문고 (0591)43-8321, 대일서점 (0591)759-9595, 상록서점 (0591)53-5954, 서점글밭 (0558)656-3212, 큰바위서점 (0597)62-3594 / **제주**(064) 학생서림 57-0727

※ 일부 비매품 정부간행물은 위 판매센터에서 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